

大學政策 改革의 '90년대

金 蘭 洙
(延世大 教育學科)

1. 大學政策의 획기적 轉換期

지난 날의 추세 연장적 관점으로 보나 밝은 미래를 바르게 선택하고 건설하여야 할 당위적 관점에서 보나 우리의 대학 정책은 획기적인 전환을 할 것이고 또 하여야만 할 것이 '90년대의 전망이다. 우선 우리 사회의 현실을 살펴 보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民主化'의 거센 물결 속에서 사회 각 분야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저마다의 권익을 추구하려는 욕구에서 비롯된 성급한 폭거적인 집단 행동으로 마찰과 갈등은 격화 일로를 밟고 있다. '民主化' 자체에 대한 회의마저 고개를 정도이다. 법은 있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무엇이 옳고 그릇된 것인지 가치 규범이 혼돈을 일으켜서 사회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밝은 미래 사회 건설의 操舵手 역할을 맡아야 할 교육계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장래를 우려하고 계탄하는 소리가 드물게 일고 있다.

대학은 모든 사회 불안의 發源地帶로 보여지고 있을 뿐, 어떻게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정견의 숙수무책이고 정책의 불투명 대상으로 되고 있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최고 學府로서 사회 발전의 중추적 두뇌 집단이고, 나라의 장래가 대학의 知性에 달려 있다고 하여도 결코 지나친

말일 수 없다.

해방 이후 대학은 정치적·사회적 변혁의 선도역을 맡아 왔고 오늘의 민주화에로의 물고물 뜬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공적이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앞으로 참된 민주 사회 건설도 지도자적 자질을 함양하는 대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사회의 구조가 권력의 분산화, 기능의 다원화 그리고 업무의 전문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대학의 여러 가지 기능 수행이 확충되고 효율성을 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년간 노동집약적인 산업 육성책이 주효하여서 우리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된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이 초등교육의 보편화와 중등교육의 보급 속으로 때맞게 성실·유능·근면한 근로 인력을 量産·供給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지난 날 지속되었던 고도 경제 성장도 한계점에 달하였고, 안정 성장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국제 경제 질서 속에서는 상황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기술 개발과 축적을 통한 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 없이는 한국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 이상 지탱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기술보호주의가 팽배해짐에 따라서

단순 노동집약적인 산업만으로는 경제 발전이 벽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강한 의욕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저임금 근로 인력에 더이상 맞서 나갈 수가 없다. 더욱이 그들 나라는 자원의 富國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집약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비중을 높여 가야 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의 知的 勤勞者의 비율을 높여 나가야만 한다. 고도 지식 산업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발전 전략은 각급 교육, 특히 대학교육은 질적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徐明源박사의 표현대로 “誤導된 教育熱로 大學 人口는 팽창 일로에 있으나, 物質萬能主義의 世波는 眞理 探究의 殿堂에 까지 침투되어 工場化된 大學은 商品化된 지식과 기술의 壟斷에만 급급한 감이 없지 않다”¹⁾고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행정 관행 속에서 대학마다의 個性(university identity)은 간 곳 없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適宜性을 살리는 탄력성 있는 적응력(institutional adaptability)은 불똥이 없게 되었다. 대학의 건학 이념은 문서에 담겨져 있을 뿐 전면일률적인 획일성이 대학 풍토를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 체제도 국가 체제의 하위 체제임에 틀림은 없다. 그러나 통합적인 부문이 되어야 하고 선도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야 한다. 입법·사법·행정의 三府에 더해서 第四府의 구실을 교육 부문이 맡아야 한다는 명제도 그런 뜻에서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교육계의 실상은 이와는 거리가 멀다.

사회 각 분야는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서 전문직별의 전문성 신장과 권익 옹호를 증진시키기 위한 自律的 運營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각종 사회 기구 및 기업들은 비교적 정부의 간섭없이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사회 변화가 모든 측면에서 신속성·복잡성 그리고 전문성의 폭을 넓혀 나감에 따라서 정부가 문제 해결을 도맡아 나갈 수는 없게 된다. 사회

적 자원의 폭을 확대시키고 정부의 기능은 매우 요긴하고 꼭 처리하여야 할 문제 해결에 지도 조성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이른바 ‘작은 정부론’이 고개를 든 지는 오래이다.

우리도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자율화를 신장시키고 정착시키 나가야 하는 것이 '90 년대의 사회적 추세가 될 것이고 또 되어야만 한다. 보는 이의 視角에 따라 見解差가 있겠지만, 사회·정치 체제가 과감히 민주화되는 큰 혁명적 변화(major revolutionary changes)를 이룩해 가는데 비하면, 교육계는 조그마한 점진적 변화(minor incremental changes)에도 제동이 걸리는 規制的 行政의 落後性이 尙存한다. 대학 자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改革的이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保守性向의 구태의연한 상황에 안주하고 있다.

요컨대, 대학에 대한 정부의 시책과 대학 자체의 학사 정책이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발전도, 대학의 안정도 期待할 수 없는 '90 년대로 보여진다. 改革的 政策課題는 허다하지만, 據點大學의 重點 支援 그리고 大學 評價制度의 確立 등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據點大學에 대한 重點 支援

지난 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아래에서는 正統性 危機 극복의 음성적 수법으로 정경유착이 횡행하여서 정권의 庇護를 받았던 기업들이 많았다. 그러나 개방 사회화됨에 따라서 부실 기업은 자연 도태를 당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자생력이 키워지고 강해지고도 있다.

대학도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부실 대학에 대한 냉엄한 업적주의(meritocracy)를 적용하여야 할 時點에 들어 섰다고 할 수 있다. 전임 교원의 자질과 그 수에 있어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는 대학들도 학생의 납입금이 균일화되고 있는 것은 市場經濟의 원칙에서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한 대학들이 학과의 증설과 입학성

1) 徐明源, “轉換期的 社會變化와 高等教育의 當面課題”, 韓國高等教育研究會 창립 1주년 기념 세미나 유인물.

정원의 増員에 있어서 기업계에 만연되었던 政經癒着과 같은 행정적 특혜가 주어졌던 바람직스럽지 못한 작태는 중지부를 찍는 '90 년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0 여년간 대학 평가의 일로 대학 방문을 해 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평판과 대학마다의 內實度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곳이 많았다. 그러므로 신입생의 대학 입학 학력고사 성적은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교육 여건의 정비와 교수들에 대한 연구 시설과 연구비 지원 조건에 있어서 알차게 內實을 기하고 학문적 탁월성의 신장을 위해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에 대한 행정적 배려와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대학 정책이 果斷性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및 연구 조건이 우수한 대학에 대한 우선적 중점 지원책을 짜야만 한다.

이러한 주장은 대학의 재정 체제(financing system)의 개혁도 전제로 하고 하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학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어야 하고 기업을 비롯한 각종 제단의 공공 지원이 강화되어야만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때 可用財源은 限定性을 띄우게 마련이므로 投資効果의 極大化를 위해서는 중전과 같은 機械的 均配 節次는 탈피하여야 하겠다.

Hare, R.M. 는 正義實現論에 있어서 흥미로운 이론 제기를 한 적이 있다. 菓子說과 裝備說이다.²⁾ 菓子は 맛으로 골고루 나누어 먹어야 한다. 그러나 비싼 장미는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에게만 쓰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중·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회 복지 시책과 같은 교육 복지 시책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학생 수를 단위로 한 均配原則의 적용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학에 대한 투자는 학생 수나 외형적 조건을 單一基準으로 한 劃一的 適用으로는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없게 된다.

순쉬운 예로 엄청난 값의 비행기를 아무나 조

정하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의 대학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배출해 내는 고급 인력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어야 우리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지도 인력과 지도성을 훌륭히 涵養하려면 대학교육의 單價(unit cost)는 엄청나게 高價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중언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내실있는 대학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적 안배는 필요하다. 수도권에 역사가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예컨대, 전국 대학들을 四大地域圈으로 나누어 보고, 권내의 종합적 발전책 강구에 있어서 戰略的 據點 구실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을 가려 뽑아서 地域發展의 衡平性을 확보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據點大學의 選定은 원칙적으로 設立의 起源에 있어서 국·공·사립에 따르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학 설립의 二元制(dual system)가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바람직스럽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공·사립대학의 비율이 據點大學 選定數에 반영되어야 한다.

3. 大學評價의 制度的 確立

거점대학 선정의 기준과 절차는 지난 10 여년간 행해 온 대학 업적 평정제를 準用하던 된 것이다. 대학에 대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 업무 수행에 있어서 官主導를 탈피하여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분적으로나마 위임하기 시작한 것은 '70 년대초에 시작한 이론나 '실험대학'을 통한 學事改革 사업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80 년대초에 들어서서는 대학간의 협의 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기관과 대학내 각종 프로그램의 평가 업무를 주관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향 전환을 이룩해 오고 있다.

2) Spitzberg, I.J.(ed.), Universities and the International Distribution of Knowledge(New York : Praeger Pub. Co., 1980), pp.6~7.

그러나 지난 날의 대학 평가는 크게 보아서 評價的 研究(evaluation research)의 성격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평가 결과를 행정적 인가 및 재정적 지원에 반영시키는 실질적인 결정권의 행사는 예나 다름없이 행정 관료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90년대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정치 및 행정 체제가 탈바꿈을 하고 민주화가 체제적으로 정착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교육 행정 체제도 탈바꿈을 해야 할 차비를 갖추어야 한다.

前述한 바와 같이 교육 체제는 국가 체제의 하위 체제이지만, 모든 체제 개발의 統合的 部門이 되어야 하고 또 가장 先導的 側面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命題가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전통적으로 자율성을 부여해 오던 대학에 대한 자율성 신장책 확립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巨大規模化되고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오늘의 대학은 대학 단위로 재정적 자기 충족성을 가질 수도 없고, 다양한 公共支援이 주어지게 되고 또 바랄 수밖에 없게 된 점이다. 그러다 보니 배타적 또는 폐쇄적인 성격의 기관 운영 자율성(institutional autonomy) 주장은 Perkins, J.A.의 말처럼 이제는 향수어린 꿈(nostalgic dream)에 지나지 않게끔 虛無스럽다.³⁾

방대한 공공 지원에 대한 資務性 이행을 온전하게 해 나가려면 集團的인 自律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범을 하여서 대학 평가와 더불어 연구 개발을 통한 정책 권의권도 부여되어 있다.

蛇足같지만, 대학 평가를 교수들을 위주로 한 전문가 집단이 主導해야 할 까닭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첫째는 대학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방향 설정에 있어서 專門性을 심화시켜야 하는 점이다. 여러 학문 분야를 망라해서 하나의 學問的 小宇宙를 이룩하고 있는 대학 사회는 학문 분야별로 제각기의 학술적 특이성을 지니고 있다. 학술 연구

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각기의 중핵 과업이 다양한 고도의 복합적 조직이 대학의 특징이다. 따라서 대학 행정을 효율화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학문 분야별로 전문적 식견과 학사 관리에 관한 심층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專門的 造詣에 기초한 올바른 판단과 創意的 構想力을 활용하지 않고서는 대학 행정은 漂流할 수밖에 없다.

둘째로 대학 행정의 정통성 확립으로 공신력을 제고시켜 나가야 하는 점이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관리 운영에 대한 전문적 경험과 식견이 높은 행정 관료의 견제는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학문 사회에 대한 관리 체제를 개선하는 방안 강구에 있어서는 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의 전문가 집단이 주도적 참여를 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을 받게 될 때 대학 시책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은 드높아진다.

셋째로 대학 행정 시책의 안정성 및 일관성을 확립하여야 하는 점이다. 일반 행정 관료들은 일정한 전문 부서에 장기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못하다. 垂直 또는 水平 移動의 과정에서 여러 부서에 轉補됨으로써 각종 행정 업무에 종합적으로 통달하게 되는 잇점은 있다. 그러나 세부 부서의 특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업무의 성질과 달은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지만, 인사 이동에 따라서 방침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일관성을 잃고 안정성을 약화시킬 잠재적 위험은 恒存한다. 교육 시책이 효과를 거두는 데에는 장기기간이 필요한데 대학 시책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 朝令暮改式이 되어서는 진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대학 정책은 심의 과정에서 신중하여야 하고 꾸준한 지속적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생애를 두고 제각기의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는 전문가 집단 속에 구심점을 두고 그들의 참여를 계속시켜 나가면 위원들은 교체되어 나간다고 하더라도 대학 계획 사업 또는 그밖의 시책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시켜 나갈 수가 있다. 改革과 安定의 比率도 이들의 전문적 판단

3) Perkins, J.A., *University in Transition*.

속에서 균형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획책될 수 있다.

또한 대학의 본질적 사명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약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편성과 운영의 適宜性을 深層 把握할 專門的 造詣가 없으면 건물이라든가 장서 수 및 실험 실습 기제 수와 같은 外形的 威容(extrinsic prestige image)에 현혹되어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그동안 각종 대학 평가 프로그램에 교수 위원회가 활용되어서 경험 축적도 늘어나고 있다. 위원회에게 지워진 책임만큼의 권한 부여가 있어야 할 '90년대이다. 대학 행정의 현대성을 상징하는 장식적 기구로서 위원회 방식을 쓰게 될 때 최고의 경륜을 가지고 주체 의식이 확고한 대학인은 참여를 기피할 것이 당연하다.

'74년 필자가 영국의 대학보조위원회(UGC, 현재는 UFC로 바뀜)를 방문했을 때 위원장의 선정 위촉은 정부에서 행하되,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수행을 위원장에게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방식을 보고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은 바가 있었다. 동 기구내의 행정 요원들이 장기 근속하며 전문성을 함양하여서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방식을 우리도 크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학 업적 평정제의 확립을 강조하게 되는 또 다른 까닭은 '90년대는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충되는 연대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據點大學에 대한 重點支援策에서 시사하였지만, 內實있는 우수 대학에 대한 우선적·중점적 지원책을 세울 때 그 공정성을 기하려면 대학인의 전문적 조예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擬似政治인 備實性을 배제하고 嚴正性을 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를 학생으로 보고 교육비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을 옳다고만 할 수 없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므로 국가 혜택을 보는 것이다. 사립대학의 수익 사업이 영세하여 재단 전입금은 명목적이고, 학생 납입금에 거의 의존하는 상태에서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는 기대할 수가 없다.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납입금에 차등제를 둘 필요도

없다. 인재를 발굴(talent identification)하는 전형 절차를 밟아 우수 학생에게 학비 전액과 생활비 보조까지 포함한 장학금을 주어서 그 지원하는 대학에 가도록 해야만 大學間의 善意的 건설적 競合 努力에 불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만 대학의 개성도 소생되고 신장된다. 이제는 사립대학 기능 수행의 공익성과 운영의 공개성이 자의반 타의반으로나마 움뻐고, '90년대는 대학 개혁이 촉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앞서 적은 바와 같이 대학 정책이 여러모로 획기적 전환을 해야 할 시점이다.

국·공립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충되어야 하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국고 보조가 있어야 하고 점차로 늘려 나가야 한다.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교육을 특전으로 부여하는 公費型이다. 南美는 학생을 수혜자로 본 관점에서 학생과 학부형 부담의 私費型이다. 미국은 혼합형으로 주립대학은 학생 납입금이 저렴하고 사립대학의 납입금액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free market system)로 천차 만별이지만, 사립대학에 대한 제정 보조는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대학 제정 체제가 혼합형 이랄 수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70년에 시작하여 '75년 사학진흥원조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어 '79년에는 국고 보조가 사립대학 경상비의 24%에 달했다가 근래에 그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87년 시점에서 보면 사립대학 경상비의 18.2% 선으로 총액이 2,400억 엔이었다. 대학에 따라 최고액은 日本大學 112억 엔, 게이오대학 65.8억 엔, 와세다 대학이 58.2억 엔이고, 평균해서 약 3억 엔씩을 보조 받고 있다. 학생 1인당의 교부액으로 보면 대학 20만 1천 엔, 단기대학 15만 5천 엔, 고등전문학교가 18만 엔이다. 학부별로 보면 醫學部가 225만 7천 엔, 商學部가 79만 4천 엔, 理工學部가 23만 9천 엔, 기타 학부가 13만 7천 엔으로 되어 있었다.⁴⁾

文部省 企劃官과의 면담에서 자세한 상황을 알게 되었지만, 대학마다의 경상비 보조액이 다른 까닭은 각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조건의 자체 정

4) 教育學術新聞, '87.10.21, p.1.

비 상황을 감안해서 이른바 ‘傾斜配分方式’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알차게 운영하는 대학은 그만큼 더 보태주고 부실한 대학은 그만큼 덜 보태주는 방식을 쓰는 것이다.

명목적인 보조책으로서는 학생 수를 기준한 획일적 지원책으로도 그러저럭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을 쓰는 상황에서는 냉엄한 業績主義를 적용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학 평가 인정제를 확립시켜 나가야 할 '90년대이다.

4. 맺는 말

'90년대가 대학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기해야 하고, 그 例示的인 과제로 據點大學에 대한 重點支援과 大學評價制의 확립 문제를 거론하였지만 改革해야 할 課題는 山積되어 있다. 만성적 학원 소요의 원인은 대학 외적 요인들이 작용한 점이 크지만, 대학 운영의 부실과 음성적인 부정에 기인하는 것도 많다. 그러한 대학에 대한 啓蒙的인 接近이 한계 상황에 달하면 規制的 戰略을 남용해 온 것도 우리가 겪어 보는 일이다. 사회에 참여 체제(mass participative system)가 확산되는 데 知性的 都市인 대학 사

회가 姑息的인 운영 체제에 안주하다 보니 소수 극단주의 집단의 환기 무대로 둔갑해서 寧日이 없다.

나타의 대학 정책에서부터 대학마다의 학사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교수들이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보릿고개’ 시절이 있던 절대 빈곤의 시대는 지나 갔으나, 교육 여건은 아직도 그 무렵과 큰 차이가 없다. 국제적 비교 안목에서 보면, 우리 대학의 교육 여건은 선진국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고급 연구 인력의 83%가 대학에 있지만, 연구개발비의 투입 비율은 매우 낮아서 5.5%에 지나지 않으니 硏究不毛地帶로 放置되어 있는 느낌이 크다.⁵⁾ 기술보호주의 장벽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열강의 대학들과 맞겨울 수 있는 연구 조건을 우리 대학이 갖추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는 焦眉의 急務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대학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지만, 自力更生の 精神을 振作하여 많은 改革을 이룩해야 한다. ※

5) Young-gul Kim, "A New Experiment in Academia-Industry Cooperation", *Higher Education and the Asia-Pacific Century*, p.48.